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유 팔 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기본 구조

교육부는 '95년 12월 17일 '97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에 적용되는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의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의해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도의 기본틀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행정 통제를 크게 줄인 반면, 대학은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필답시험에 의한

선발을 대신해서 종합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확대시킨 점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명칭을 입시제도가 아니라 '전형제도'라 명명하였다. 이번의 전형제도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전형방법이다.

우선은 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던 종전의 제도를 고쳐 성적 대신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삼도록 했으며, 반영 여부, 비율,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97학년도에는 40% 이상의 비중을 두도록

(총점의 40% 이상을 반영하거나 모집총원의 40% 이상을 종합생활기록부를 통해 사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논술고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였고, 대학평가를 통해 '97학년도부터 각 대학의 전형 기준과 방법을 평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은 신입생을 연중 수시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교육부는 종전에 특차/전기(1, 2, 3차)/후기로 나누어 모집하던 일정에서 후기모집을 없애고, 이를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조정했다. 후기모집을 대신해서는 대학이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수시모집을 가능하게 했으며, 추가모집은 종전처럼 가능하게 하였다. 정시모집에는 4개의 시험 기간군을 설정하여 같은 시험 기간군에 속한 대학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97학년도에는 특차모집('96.12.11~14) 이후의 정시모집을 가('96.12.26~30), 나('97.1.3~7), 다('97.1.8~12), 라('97.1.13~17) 등 4개의 시험 기간군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은 각 대학이 국가가 정한 특차, 정시모집 시기 이전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대학이 입학시기를 매학기별로 정할 경우, 학기별 모집인원은 당해 입학 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입학 학기가 3월인 대학은 전학년도 11월 1일 이후

부터 국가 조정 선발일정 전까지, '97년도에는 특차모집 시기 이전인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추가모집을 통해서도 수시, 특차, 정시모집에서 미달 혹은 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게 하였다.¹⁾

이 밖에도 전형유형을 종전과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었으나,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기여입학제는 금지하기로 하였다. 특별전형은 전형대상과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놓여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2. 각 대학의 '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계획

이와 같은 교육부 시행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한 '97학년도 입학 전형계획을 보면 '96년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특차모집을 하는 대학은 26개국·공립대학 가운데 17개교, 108개 사립대학 가운데 68개교, 11개 교육대학 3개교로서 총 145개교 가운데 88개교(60.7%)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을 하는 대학은 26개국·공립대학 가운데 17개교, 108개 사립대학 가운데 61개교로서 총 145개교 가운데 78개교(53.8%)이다. 이 밖에 추가모집을 하는 대학은 사립대학 2개교에 불과하다. 정시모집의 경우, 151개교(분할모집 6개교는 중복) 가운데 '가'군을 선택한 학교는 51개교(33.8%), '나'군을 선택한 학교는

1) '97학년도의 추가모집 시기는 '97. 1. 27~2. 28이다.

43개교(28.5%), '다'군을 선택한 학교는 46개교(30.5), '라'군을 선택한 학교는 11개교(7.3%)이다.

수능시험 반영비율(입시총점 대비)은 60% 이상인 대학이 80개교, 50~59%인 대학이 56개교, 40~49%인 대학이 18개교, 40% 미만인 대학은 2개교이다.²⁾ 이 가운데 33개교는 또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둔다.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입시총점 대비)은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40%이다. 사립대학들의 경우, 1/3 정도의 대학들이 계열별, 학과별로 달리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대체로 60% 가까운 대학들이 반영비율을 40%로 하고 있으며, 40% 미만인 대학 및 계열이 1/4 정도이고, 50% 이상인 경우는 1/7 정도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항목들 중에서는 대부분 교과성적과 출결상황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기록부 점수를 100으로 할 때, 10여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과성적을 80% 이상의 비중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상황 등의 항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과 10% 수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각각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면접과 구술고사를 전체 혹은 일부 계열에 반영하는 대학은 국·공립, 사립을 합쳐 모두 101개교인데, 이 중 4개교를 제외하고는 10% 이하, 그 중 대부분은 5%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5개교(국립 4, 공립 2, 교육대 1, 사립 18개교)에서는 일부 계열 혹은 전 계열에 대해 논술고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점대비 점수반영 비율은 대부분 10% 안팎에 불과하다.³⁾

3. 교육개혁의 정신과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대학입시제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가 없어지고, 본고사를 여전히 실시하는 대학도 논술고사로 국한되며, 이 경우에도 점수 반영비율이 10% 안팎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1차적인 요인은 교육부가 '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에게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고교 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 반영하도록 강제한 데에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교육개혁 정책에 순응하는가의 여부를 '대학평가' 및 선별 지원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간접적인 압력과 유도정책을 편 데에 있다.

'97학년도의 새 대학입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본정신과 동기로 작용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의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5·31 교육개혁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 교육개혁의 정신에서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은 첫째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이다. 둘째는 이것

2) 이러한 분포상은 일부의 대학들이 계열별로 반영비율을 달리하고 있어 실제 사정과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 또 연세대(서울캠퍼스)와 같은 경우는 총 모집인원의 10%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3) 『경향신문』, '96년 3월 6일자 참조.

과 관련이 깊지만 대학입시 위주의 암기교육, 획일적 교육, 이에 따른 과외공부 등 국민적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셋째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자율화를 통해 교육과 학생선발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며, 넷째는 이러한 교육개혁 조치들을 통해 교육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대학별 본고사를 없애도록 하고 '시험' 대신 '전형'을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점은 특히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학별 본고사가 없어지거나 논술고사로 제한하여 비중이 크게 낮아지도록 한 점은 단순한 지식 암기능력보다는 사고력 향상과 통합교과적 교육을 중시하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에 이에 준하는 파급효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 국·공립대학에 생활기록부를 40% 이상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하여 수능시험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기준선을 제시한 점 또한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3년 동안 입시제도는 매년 바뀌어 왔으며, 대학평가 및 자율화 추세와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개혁'이 지니는 급속한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그 밖의 입시 관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내실을 결한 졸속이 수반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96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의 해프닝들이 벌어진 바 있다.

예컨대, '95년 하반기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부제'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학부제는 교개위의 제안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서둘러 채택한 제도로써 '95년 10월 6일 발표된 '96학년도 대학 학과별 정원조정안'에 의하면, 64개 대학이 학부제 모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에서 모두 745개 학과가 246개 학부, 학과로 통폐합되었다.⁴⁾ 대학들이 서둘러 학부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통합교과적 학문과 교육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따르는 정도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정책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부제나 계열화 시도가 대학 발전의 차원보다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할 위험을 안고 있다."⁵⁾를 받고 있다. 또한 학부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기 전공과목과 비인기 전공과목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왜소화 및 존폐 위기가 초래될 전망이 커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 심지어는 대학 내의 분란도 야기되고 있다.⁶⁾ '복수지원제'는 입시원서 마감을 전후하

4) 박거용, "김영삼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경제와 사회』, 겨울호, 1995, 185쪽.

5) 신양균,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96년 1/2월호.

6) 박거용, 위의 글, 187쪽 참조.

여 수험생과 학부모들(특히, 서울지역 대학에 지망하는 지방 출신의 경우)에게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이 복수지원제로 인해 수많은 대학들이 자기 대학보다 약간 더 '상위'에 있는 대학들로 적지 않은 수의 성적 우수 합격자들을 빼앗겨,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적지 않은 수의 추가 합격자를 1차, 2차 연쇄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⁷⁾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은 채점에 커다란 애를 먹었을 뿐 아니라 채점 결과도 객관성이나 공신력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종합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소리가 크다. '95년도에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어느 현직 고교 교사는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현 제도보다는 훨씬 개선된 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과중한 수업부담과 학생지도, 잡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로서는 획기적인 근무여건의 변화 없이는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일선 교사들의 반향을 전했다.⁸⁾ 이와 관련하여 충남 지역 현직교사 1백 명은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학교현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며 교무회의 법제화 등의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⁹⁾ 또한 3천여 명의 교사, 교장을 상대로 한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64%가 "현실정에서 생활기록부의 충실한 항목별 평가

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교장의 47.9%가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한다.¹⁰⁾

대학입시 제도를 빨리 빨리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해프닝도 벌어지게 만든다. 빨리, 자주 바꾸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요구되는 여건들을 함께 마련하는 것,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4. 대학 문호의 개방과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정책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열경쟁,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국가적인 낭비와 손실 그리고 교육의 기형화와 기회 불균등 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뿌리가 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대학입시 제도 개선만으로는 그 해결의 전망이 밝지 못하며, 보다 넓은 시야 속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과열되고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를 겨냥한 교육과 과외가 지배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의 하나는 학벌주의다. 흔히 말하듯,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고, 그것도 좋은

7) 연세대의 경우는 전기 1차 합격자 3,253명 가운데 40%가 넘는 1,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으며, 의예과 전기 전형 합격자 48명 가운데 등록한 학생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한다(『중앙일보』, 1996년 2월 17일자 보도). 이와 유사한 연쇄반응은 전국에 걸쳐서 일어난 바 있다.
 8) 『한겨레신문』, 1995년 6월 2일자.
 9) 『한겨레신문』, 1995년 6월 3일자.
 10) 『한국교육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대학, 명문대학을 나와야 취직도 잘 되고 출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벌주의는 학부모들과 수험생들 자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일반 사회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학벌주의를 불식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겨냥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우선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넓혀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입시 경쟁률 자체를 낮추어 감으로써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¹¹⁾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이 보다 확대되어 대학입학 정원의 책정이나 대학 시설 및 교수요원의 확충, 대학 신설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폭도 넓혀야 할 것이다.

우선 정원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94년 12월 대학 학생 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6년도에는 '교육여건 연동제'를 실시하고, '98년도 이

후부터는 대학 정원을 완전 자율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97학년도에는 지방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하고, '98학년도부터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할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 이같은 자율화 조치는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대학 정원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며, "정원 자율화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개혁 추진기획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¹³⁾

교육부에 따르면, '96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육여건 연동제에서는 자율 역량을 갖춘 대학은 학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여건이 미비된 대학은 교육부가 평가하여 정원 규모를 결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입학 정원을 책정한다. 자율 책정권 부여 대상 대학은 대학평가인정제에 의해 평가 인정된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여건 지표가 충족되는 대학에서 선정한다.¹⁴⁾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도 자율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 인가제로부터 '준칙주의'로 전환

11) '94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45.8%로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 경쟁(교대 포함)은 '94년도 3.3 대 1, '95년도 2.9 대 1이며, '96년도에는 복수지원을 포함해 4.3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김영식,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내용", 『대학교육』, '95년 3/4월호 참조.

12) 교육개혁 추진기획단, "교육개혁 추진 관련 회의자료", 1995년 9월 27일.

13) 여기서도 '97학년도부터 지방 대학 정원 자율화를, '98년도부터는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를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① 대학 정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수립('95.11), ② 대학 학생정원령 개정('95.11), ③ 교육여건 지표의 고시('95.12), 대학의 정원 자율화에 따른 정원조정 안내('96.1),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책정 발표('96.10) 등 구체적인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교육개혁 추진기획단, 위의 자료).

14) 김영식, 앞 글 참조. 여기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하는 '자율 책정권 부여 대학 선정을 위한 교육여건 기준'은 ① 교수 확보율(65% 이상), ② 교수 1인당 학생수(35명 이하), ③ 교사(시설) 확보율(75% 이상), ④ 도서관임비(21,000원 이상), ⑤ 운영비 중 실습비(2.5% 이상), ⑥ 운영비 중 법인전입금(10% 이상), ⑦ 학생 1인당 교육비(180만 원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하여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시설, 교원 및 적정 재정규모 등 학교 설립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칙주의는 1996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¹⁵⁾ 이에 따라 교육부는 '95년 6월 21일 '대학설립 준칙안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5년 12월 대학 설립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월에 설립 준칙에 관한 시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관보에 입법 예고중이며 '97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¹⁶⁾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평가와 연동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평가와 해당 대학 이외의 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차등 지원하되, 지원 단위를 대학에서 계열 또는 학부(또는 학과) 단위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개혁 추진 기획단에 의하면, 이를 위해 '95년 10월까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확정하여 '96년 예산부터 재정 차등 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¹⁷⁾

정부가 확정된 '96년도 예산 가운데 대학 지원에 할당된 총 재정 규모는 1조 원 가량

으로, '95년도의 총 대학 보조금 5천 2백억 원¹⁸⁾보다 2배 가량 증액되었다. 이 중 대학별 효율화 정도에 따라 대학별 자구노력 지원비를 '95년의 500억 원에서 '96년에는 1,00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대학별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국책 지원방식 예산 역시 6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립대 시설비는 1,034억을 늘려 2,921억을 배정했다. 국·사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도 700억 원을 증액하여 1,850억 원을 배정했다.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액도 '95년의 2,405억에서 3,446억 원으로 증액했다.¹⁹⁾

이와 같이 정부는 사실상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의 자율화 및 재정지원의 정책을 폼에 있어서 대학평가와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학,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열심히 순응하는 대학에 대해 정원 자율화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베푸는 것은 합리적인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폐단과 불합리성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위 '경쟁력 있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차등화 정책에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심한 격차 속에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들간의 서열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군소·사립·지방 대학'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

15)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년 5월 31일,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6) 교육개혁 추진기획단, 앞의 자료.

17) 교육개혁 추진기획단, 위의 자료.

18) 『중앙일보』, 1995년 6월 2일자.

19) 『한국교육신문』, 1995년 10월 11일자.

업들처럼 교육여건의 면에서 한층 더 열악해지게 되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²⁰⁾ 이와 함께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교육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사교육비를 통한 학부모 부담과 사립대학의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주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등록금 인상,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학생 규모와 등록금 수준에 비해 교육시설과 여건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²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경쟁력 후지원' 정책보다는 '선지원 후경쟁력'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을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 잘 부합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만하다.

대학 문호의 개방과 관련하여 또 필요한 것은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과 기업, 주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따라서 '강

자'와 소위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집중되는 각종의 행·재정적 지원을 그 반대로 '약자'와 경쟁력이 약한 대학으로 전환시켜 가는 정책이다. 이 역시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는 부와 시장점유, 금융여신을 규제하는 대신 수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격의 정책이다.

'명문' 개념을 없애 나가는 정책은 그것이 학벌주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벌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이다. 개성과 전통과 특성을 가진 대학은 존재하되, 전국의 대학과 학과를 수능 점수로 서열화하게 만드는 '명문대학'은 없애 나가는 것이다. 명문대학의 개념을 없애 나가는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식으로 서울 지역의 대학을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식으로 개명하는 방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²²⁾

명문과 학벌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 또한 크게 바뀌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입시를 영리 수단으

20) 손준중("정원관리 자율화의 의미와 문제점", 『대학교육』, '95년 3/4월호, 30쪽)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원 자율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근거한 자유경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 정원 자율화 정책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재정이 빈약하고 학생이 물리지 않는 대학을 문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21) 대학재정의 취약성, 특히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취약성은 '95년도에 실시한 대학평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1995. 12)에 의하면, '95년도에 평가대상이 된 23개 국·사립 대학 가운데 8개 사립대학이 세입에서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78쪽). 또 전체 사립대학 19개교 가운데 법인 전입금 비율이 15% 이상인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고, 12% 이상 15% 미만인 학교가 3개, 나머지 10개교는 12% 미만이었으며, 그 중 2개교는 6%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79쪽). 국내 사립대학 전체의 평균은 13~15% 수준이다(158쪽).

22) 경북대 박찬석 총장("지역대학 인재할당제", 『대학교육』, '95년 3/4월호)에 의하면, 대구·경북의 경우 매년 4,000명의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가는데, 그 비용은 1,05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그 지역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에서 유학을 한 동창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또 이와 같은 현상, 즉 인재의 서울 집중 현상과 지역간 불균등 발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대학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로 삼아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 시켜온 사설학원, 출판업 등 소위 '입시산업'의 각성, 거기에 대한 규제도 필수적이다. 대학입시와 수능시험 예상문제를 앞다퉈 게재하고, '명문대학'의 입시를 집중 보도하고 수석 합격자를 영웅으로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상업주의 또한 과열입시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역시 규제대상에 속한다. 기업의 경우도 근래에 일부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신입사원 채용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5. '경쟁적 인간형'보다는 '협동적 인간형' 교육의 우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이와 관련된 교육개혁 정책은 기본적으로 과열 입시 해소와 대학, 초·중·고를 포함하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 정책과 입시제도 개선은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교육 정상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 현실과 여건 그리고 대학입시를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층 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정책의 수립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간의 서열화를 확대시키고,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복지정책'이라는 개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또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담론, '경쟁'과 '경쟁정신'만을 일방적으로 고취시키는 담론은 이제 그만 줄여 나가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학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대학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이를 통해 '경쟁적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각박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대학간의 교류와 협력, 협동 정신과 공동체 정신이 돈독한 '협동적 인간형'을 길러내는 교육이 더 우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팔무/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수학한 후,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학보사 주간을 맡고 있다. 계간 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사회학회 부회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 분지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공저로 『지배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춘천리포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등이 있다.